

## 기자간담회 [행정수도 문제 관련]

지금 행정수도 문제에 관해서 찬반 논란이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논의의 진행과정을 보면 행정수도 자체에 대한 찬반 논란도 논란이지만 행정수도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민투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문제와, 또 국민투표를 대통령이 공약하지 않았느냐라는 논쟁이 오히려 초점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1야당의 대표가 공약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서 정책 자체에 대한 본질적 논란은 조금 접어두고, 공약 여부에 대해서 또 그 공약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제 생각을 밝히겠습니다. 제1야당의 대표가 그것을 밝히라고 하니깐 밝혀 드리는 것이 도리인 것 같습니다.

공약 자체의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때때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어떤 때에는 그냥 조건 없이 단정적으로, 또 어떤 때에는 유보조건을 붙여서 국민투표를 한다 또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 왔습니다. 그것이 공약이냐 아니냐 그렇게 물으시면 제가 공약이다 이렇게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정책을 둘러싸고 진행된 여러 가지 상황이 공약을 이행할 필요가 없게 돼 버렸고, 또 그 공약을 실천하려고 하더라도 그럴 기회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책은 국회에서 여·야 4당의 합의로 통

과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종결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공약도 그 이후 그 공약을 집행할 필요가 없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는 공약을 다시 거론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결된 문제로 생각합니다.

새롭게 논의가 제기됨으로써 공약 여부를 떠나서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 옳으나 아니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여·야 4당간에 합의해서 통과시킨 정책에 관해서 대통령이 다시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하면 국회의 의사를 거역하는 것이거나 번복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3권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결정한 것을 대통령이 때때로 국민투표에 의해서 번복하자거나, 다시 확인하자 이렇게 해서야 국회 권위가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여론의 추이를 지켜봐가면서 국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한나라당은 이런 문제에 관해서 스스로의 당론을 먼저 결정하고 다음에 논란을 해야지 그렇게 무슨 공약이 있었느니 없었느니,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이런 정치적 공세의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떳떳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16대 국회에서 통과된 행정수도특별법을 폐기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한나라당 스스로 당론으로 결정하고 그렇게 해서 국회에서 당당하게 논란해야지 자꾸 대통령에게 질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가 수준이 이래 가지고 되겠다. 스스로 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정치지, 자고 나면 뒤집고, 자고 나면 흔들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국회를 신뢰하고 정책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밖에 모든 정책에 관해서 국회가 또 뭐 언제 번복할지 모르는데 정부가 무엇을 믿고 무슨 정책을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 일문일답

▶ 국회에서 정당간 논의를 거쳐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의견이 모아질 경우 국민투표를 하실 것인지?

법과 국회에서의 의결은 대통령을 구속하는 것도 있고 구속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구속력 있는 의결로서 결정하면 대통령은 그것을 그대로 집행할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의지와는 관계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법의 문제입니다.

▶ 대통령께서는 국회가 주도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했지만 대통령의 의사와 달리 이런 논란상황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일단 이런 논란의 시한 같은 것을 좀 정해주실 필요나 또는 주도적으로 나서서 논란의 종식선언 같은 것을 하실 추가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국회에서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안이 통과된다든지, 대통령이 거역할 수 없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그런 결정이 나오기 전에는 대통령은 그야말로 기존의 합의에 따라서 성실히 이 정책을 집행해 나갈 것입니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논란을 어떻게 잠재울 것이냐. 정치권이든 언론이든 국민이든 그 모두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번 결정된 것은 승복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없이 결정된 것을 자꾸 흔들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앞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번 문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정책의 논란이 아니고 정쟁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흔들기의 저의도 감추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국력의 낭비를 가져올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 엄청난 분열과 갈등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 **헌법학자들이나 일부 반대론자들은 헌법 제72조를 들어 국민투표론을 주장하고 있다. 이 부분은 대통령께서 어떻게 해석하시나?**

헌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국민적 합의 또는 정치권의 합의가 있으면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라는 견해를 가지고 대통령 재신임에 관한 국민투표 얘기를 꺼냈다가 엄청난 정치적 곤경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다시 이것이 헌법적 근거와는 별개로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거나 또는 헌법 72조에 근거가 포함된다거나 그런 것을 대통령이 지금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기에 해당되고 안 되고 간에 국회에서 여·야 4당간에 합의한 결과로서 통과된 법률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듯한 결정을 대통령에게 하라고 하는 학자들은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인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뜻에 맞기도 하지만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있습니다. 설사 대통령이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집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것을 다시 국민투표에 붙인다고 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까

제 마음에 안 드는 다른 법안, 예를 들면 선거구 제도에 관해서 저는 즐기차게 지역구도를 극복할 수 있는 선거구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는데 국회에서 이것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국민투표에 붙이

면 정치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헌법학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마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하는 헌법학자들이 먼저 국회를 무시한 처사다, 국회를 무력화하는 처사라고 해서 아마 엄청난 논란이 야기될 것입니다. 논리는 항상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공약 여부의 논란이 아니라 이 정책 자체에 대한 찬반이 먼저 전제되고, 정책 자체에 대한 찬반이 그야말로 국회에서 팽팽하게 대립되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 해결방법의 하나로서 국민투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국회가 논의해 나가야지 이런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해 나가면 국정이 너무 혼란해집니다. 앞으로 정치가 좀 질서 있게 뭔가 원칙이 있게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